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7도2839 가. 업무상횡령 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다. 배임수재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바. 입찰방해 사. 업무방해 아. 사기미수 자.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차. 사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아주 (피고인 1.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재구, 황선웅, 최유덕 법무법인 충정 (피고인 2.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장용국, 송정훈
원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07. 3. 23. 선고 2006노134, 2007노61(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업무상 횡령 및 간접보조금의 용도와 사용의 점

회사의 경영자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 그 용도 외의 사용은 그것이 회사를 위한 것이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된다(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도8 판결 참조).

한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간접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처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제34조 제1항),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고(제22조 제2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할 뿐 아니라(제41조),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제30조 제2항)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며(제31조 제1항), 반환받을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제33조 제1항)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제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간접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

로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름 생략)'이라는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강원도 및 영월군으로부터 '(이름 생략)'이라는 영화제작에 필요한 '영화촬영세트장설치 보조금'으로 이 사건 간접보조금 5억 원을 지급받아 위 '(이름 생략)'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합계 6,610만 원을 위 간접보조금의 용도와 다른 용도에 사용함과 동시에 이를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기록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내지 간접보조금 및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나. 구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의 점

구 윤락행위등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불특정'이라 함은 성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그 소속의 피디 및 술집을 통하여 구한 여성 2명에게 돈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게리 ○○○, 모하멧 △△△와 성교하도록 알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여성 2명이 성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위 여성들이 성행위의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성행위의 상대방 남성들을 위 법에서 정한 '불특정인'이라고 평가하여 윤락행위 알선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

장과 같은 윤락행위에 있어서 '불특정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다. 영화제작 협찬제안서를 통한 사기미수의 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내지 사기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라.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2000. 6. 26.자 사기의 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내지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입찰방해의 점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행위,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070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 사실과 같은 낙찰자 선정방식 및 기술평가위원 선정방식에 관한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의 공모 및 그 위계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로써 강원랜드 스키장 기계장비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내지 입찰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나. 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정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그러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라 할지라도 그러한 신분을 가진 자와 공모하여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는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원심이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들인 피고인이 도플라이어사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당시 공소외 2는 강원랜드 건설사업본부 산하 토목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강원랜드 스키장에 설치될 삭도장비의 구매를 위한 기술평가위원의 선정, 입찰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도플라이어사와 접촉하여 공소외 2에게 도플라이어사가 비행기삿을 대주겠다고 한다고 이야기하여 공소외 2와 같이 유럽에 가게 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공소외 3의 친구인 공소외 4 명의의 계좌로 여행경비를 송금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이 사건 배임수재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내지 배임수재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다. 구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의 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윤락을 알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윤락행위 알선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라. 영화제작 협찬제안서를 통한 사기미수의 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영화제작 협찬금 중 8억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강원랜드에게 영화제작 협찬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신청하였다는 공동 피고인 1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_____

주 심 대법관 김영란 _____

 대법관 김황식 _____

 대법관 안대희 _____